

2023년 국정감사 - 도서관 관련 내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공도서관 (10.10, 화)

○ 질의 : 정의당 류호정 의원

- 사서 수당 : 41년간 2만 원으로 제자리, 직무 정체성 무시당해
- 도서관 사서 배치 미준수 :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미준수 심각, 연차별 채용 계획 세워야
- 사서 노동자 : 문체부 제작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사서노동자 인권보호, 고용안정 명시해야

○ 답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서 노동 문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음
-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다
- 과거에도 사서교사를 전문가로 쓰도록 하는 등 사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주요 내용

- 사서 수당이 5급 이상은 월 3만 원, 6급 이하는 월 2만 원이다. 41년간 변동이 없이 같은 금액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도서 수당'으로 월 113,000원(8, 9급)~440,000원(관장) 책정되어 있다.
-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 인력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 문체부 소관 법령인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미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 기준을 당장 준수하지는 못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문체부가 제작 예정인 가이드라인에는 사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의무, 도서관 등 시설 내에 폭언·폭행에 대한 응대 및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 구축,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원칙, 비정규직 사서에 대해서는 교육 및 복지제도 관련 차별개선 예산 책정, 주말 등 초단시간 사서에 대해서는 최소 근무 시간 보장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 공공도서관 성교육 자료 문제 (10. 23, 월)

○ 질의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은 음란, 선정성,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352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85건을 관장 직권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서관의 이용제한은 헌법상 인쇄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제한의 기준은 저자가 아닌 저작물이어야 하고, 관장이나 해당 직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해 절차를 밟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주요 내용

-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은 음란, 선정성,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352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85건을 관장 직권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도서관은 소장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내부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의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되는 도서 중 음란, 선정성 수위가 높은 연속간행물과 저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1년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가 문제가 된 후 성범죄, 성추행, 인종차별 작가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 두 도서관의 열람 제한의 절차와 방법은 도서관 성격으로 인해 다르게 이뤄졌다. 납본도서를 성인 대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폐가제로 운영되는 도서관 특성상 홈페이지의 열람대상 목록에서 해당 도서를 제외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이용제한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없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근거해 ‘도서관 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서관이 이용심의위원회가 관장의 이용제한을 사후 추인하거나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 앞으로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절차를 밟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작은도서관 (10.23, 월)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운영 부실로 전국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국민이 독서 등 문화 향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문체부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 기관들이 방치된 작은도서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6448곳 중 2959곳(45.9%)가 ‘운영 부실’에 해당하는 D·F등급으로 평가받았다.
- 운영 부실 작은도서관은 ▲2017년 2495곳(41.2%) ▲2018년 2696곳(42.6%) ▲2019년

2831곳(42.4%) ▲2020년 3359곳(51.9%) ▲2021년 2959곳(45.9%)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광역시도별로 운영 부실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165곳(62.5%)이다. 이어 ▲대전 133곳(57.4%) ▲충남 208곳(57.2%) ▲울산 97곳(57.1%) ▲광주 182곳(55.7%) ▲충북 133곳(55.5%) ▲부산 218곳(53.9%) ▲서울 472곳(52.2%) ▲강원 110곳(50.7%) ▲전남 161곳(49.8%) ▲인천 117곳(45.5%) ▲제주 58곳(38.4%) ▲전북 131곳(37.6%) ▲경남 172곳(37.3%) ▲세종 18(34.0%) ▲경기 516곳(33.8%) ▲대구 68곳(32.7%) 순이다.
-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출실적이 단 한권도 없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수는 1326곳(20.6%)에 달했다. 10권 이하의 대출실적을 기록한 도서관도 201곳이었다.
- 상근 및 시간제 등 직원이 없는 작은도서관 수는 2316곳이었으며, 사서가 없는 작은도서관은 5722곳, 도서충원이 없는 작은도서관 수는 802곳, 도서구입비가 없는 작은도서관은 1624곳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 대학도서관 장서 폐기

○ 질의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10곳 도서관 소장 책 수가 한계를 넘어서고, 폐기 도서 선정 기준과 처리 방법도 제각각임
- 실무자는 어떤 책을 폐기할지 등 고민이므로 폐기자료 선정기준·처리방법 구체화 필요
- 폐기 자료 선정 기준과 처리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거점 공동보존서고 설립을 통해 귀중한 자료가 모르는 상태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있음
- 버릴 책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폐기목록 검토기간 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폐기자료 선정기준과 처리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거점 공동보존서고 설립을 통해 귀중한 자료가 모르는 상태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답변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 학술정보운영과에서 판단하여 폐기
- 장서폐기위원회는 없음
-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기본적으로 문서관리지침과 규정이 있는데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음

○ 주요 내용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을 통해 거점국립대 10곳의 도서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경북대학교의 한계 소장 책 수는 168만 8640권이지만, 실제 소장한 책은 342만 7573권으로 포화 비율이 203%였다.
- 경북대 다음으로 포화 비율이 높은 곳은 제주대(189%), 부산대(173%), 서울대(160%) 순이

었다. 포화 비율이 가장 낮은 전북대학교도 113%로 소장 한계를 넘어섰다.

- 최근 3년간 이들 10개 대학의 도서관이 112만 3744권을 폐기했지만 소장 장서는 49만 4297권 늘었다.
- 다만 도 의원은 "대학도서관은 대중적인 책이 많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달리 폐기 자료 선정을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기 방법, 폐기 위원회 운영 현황 등 도서 폐기 여건이 각 대학도서관별로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대는 장서 폐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16명이지만, 충남대와 부산대는 각각 1명만 있는 등 격차가 컸다. 폐기 예산 또한 서울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은 아예 없었다.
- 더구나 서울대는 별도 폐기 위원회 심의 없이 도서관장 결재를 통해 도서를 폐기한다. 반면 9개 대학 도서관은 별도 폐기 관련 위원회가 편성돼 폐기 도서 리스트를 심의 후 처리한다.
- 각 대학의 장서포화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충북대학교의 한계 소장책수는 114만6천 69권인 반면 실제 소장하고 있는 책수는 137만6천622권으로 120%에 달했다.

대학도서관 장서폐기관련 예산 편성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강원대학교	1,000,000원	1,000,000원	700,000원	563,000원	3,000,000원
경북대학교	-	-	-	-	-
경상국립대학교	-	-	5,390,000원	-	6,250,000원
부산대학교	9,394,560원	-	-	-	-
서울대학교	-	-	-	-	-
전남대학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전북대학교	-	-	-	-	-
제주대학교	-	3,000,000원	16,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충남대학교	-	-	-	-	-
충북대학교	-	-	-	-	-

그림 1 국립대 도서관 장서 폐기 관련 예산 현황

- 충남대도 한계 소장책수 153만8천379권에 실제 소장 책수는 185만3천910권으로 121%를 기록했다.

- 가장 포화비율이 높은 대학은 경북대로 203%에 달했고 제주대(189%), 부산대(173%), 서울대(160%) 순으로 장서포화비율이 높았고, 장서포화비율이 가장 낮은 전북대도 한계 소장책수를 넘긴 113%의 수치를 보였다.
- 건물연면적이 정체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장서 폐기로 소장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열곳의 대학도서관이 총 112만3천744권의 장서를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가책수는 총 49만4천297권으로 소장 장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담당직원 현황

	전담 직원 수	분담 직원 수	합계
제주대학교	2명	14명	16명
경북대학교	2명	9명	11명
전남대학교	2명	5명	7명
충북대학교	1명	5명	6명
경상국립대학교	1명	5명	6명
전북대학교	1명	3명	4명
서울대학교	3명	0명	3명
강원대학교	2명	1명	3명
충남대학교	0명	1명	1명
부산대학교	0명	1명	1명

- 도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장공간 확보를 위한 장서폐기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는 대중 도서관이 많은 다른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학문의 보고(寶庫)로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각 대학이 의원실로 제출한 장서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기예산 편성유무·폐기 방법·폐기 위원회 운영 현황·폐기 담당 직원 수 등 장서폐기 여건이 각 대학도서관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대의 경우 장서폐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16명(분담 직원 포함)인 반면, 충북대는 6명, 충남대와 부산대는 각각 1명의 인력만 있는 등 격차가 컸다. 장서폐기관련 예산 또한 서울대와 충북대, 충남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은 아예 없고 경상국립대 등 4개 대학만 편성돼 있었다.

대학도서관 장서포화비율

	연면적	적정소장공간	한계 소장책수	실제 소장책수	장서포화비율 (소장공간 부족률)
경북대학교	41,449	12,435	1,688,640	3,427,573	203%
제주대학교	17,997	5,399	733,198	1,385,226	189%
부산대학교	35,856	10,757	1,460,761	2,531,319	173%
서울대학교	79,511	23,853	3,239,278	5,167,016	160%
강원대학교	29,104	8,731	1,185,693	1,591,351	134%
경상국립대학교	32,696	9,809	1,332,035	1,614,696	121%
충남대학교	37,761	11,328	1,538,379	1,853,910	121%
충북대학교	28,131	8,439	1,146,069	1,376,622	120%
전남대학교	40,393	12,118	1,645,611	1,936,693	118%
전북대학교	40,489	12,147	1,649,522	1,870,535	113%

※ 출처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자료기준일 : 2022년 3월, 자료생성일 : 2023년 10월)

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tp://www.jbnews.com>)